

“6년 노력 물거품” 폭우 휩쓴 나주 블루베리 농가 시름

“자식 같은 농작물이 뿌리 뽑혀 나뒹굴고 있습니다.”

21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블루베리 재배 농장.

닷새 전 최대 431mm 괴물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농장은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6년 전 귀농해 농장주 이만열(57)·오지빈(57·여) 부부는 농장에서 뿌리째 뽑힌 블루베리 나무를 하나씩 다시 심고 있었다.

지난 17일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부부가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운 블루베리 나무 1000여 그루는 뿌리째 뽑혔다. 4000여 평 규모에 하우스 8동 모두 초토화됐다.

하우스 곳곳엔 당시 물살의 세기를 가늠할 수 있는 비닐이 갈기갈기 찢긴 흔적이 보였다. 지시대 역할을 하는 철골 구조물은 휘어 있었다. 바다 역시 토사물과 비로 흥건하게 젖어있었다.

수해 복구작업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부부는 아직도 하우스 1동을 정리하지 못했다.

부부는 함께 운영하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농장의 7~8월 예약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지난 주말 체험을 위해 찾아온 손님도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다.

부부는 지난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에 이어 이번 폭우로 농장이 송두리째 뒤엎어진 현실에 좌절했다.

아내 오씨는 “거센 비가 내릴 당시 손 쓸 틈도 없이 물이 밀려왔다. 모든 게 휩쓸려가고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농장으로



21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이만열(57)씨가 폭우로 인해 뿌리째 뽑힌 블루베리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

폭우에 블루베리 1000여 그루 쓰러져 지난해 햇볕 데임, 올해는 폭우 ‘울상’ 농장 체험도 줄줄이 취소… “도와달라”

가려고 했지만 남편과 아들이 두 손 두 팔 잡고 말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상황을 보니 복구 작업을 할 엄두가 안 난다. 귀농하고 6년 동안 손가

락에 관절염이 올 정도로 농장 가꾸는 데 매진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편 이씨는 “더 이상 빔을 내서 농장을 운영하기도 어렵다. 나무가 모두 상해 앞으로 수확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가장 바라는 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농장이 조금이나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 곳곳에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00mm 안팎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나주/이명열 기자



휴대전화 없는 학교생활규칙을 마련한 광주새별초등학교. 사진=새별초교

‘휴대폰 없는 학교’… 광주새별초의 특별한 실험

등교 후 휴대폰 반납… 생활규칙 개정 구성원 전체 참여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들은 이 같은 학교생활규칙을 전원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새별초등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놀맛나는 스마트폰 프리스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등교한 후 특정 장소에 휴대전화를 모두 보관하고 학교시 다시 찾아가는 학교생활규칙이다.

기존에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개인 가방에 보관하도록 했으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 쉬는시간 등에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직원 회의를 통한 문제의식 공유, 학생 대상 휴대전화 사용 실태 진단, 학생자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생활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학교생활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체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학생 72%, 교사 97%, 학부모 98%가 찬성했다.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방해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수거한 경우는 있지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생활규칙을 마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은 드문 경우다.

노제야 새별초 4학년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학교생활규칙이 마련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눈먼 돈 끌궤’ 먹잇감 된 지자체 투자보조금… “심사 강화해야”

투자 유치·지역 고용 창출 목적으로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형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소중할 현실지만 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이라 여기며 먹잇감 삼는 조직적인 자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보조금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지만,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금 지출 심사와 부실 관리·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유통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사가 전남 한 지자체에 ‘투자금 490억대 냉동식품 제조·유통 공장’을 신축하려 한다며 사업 계획을 거짓 제안, 투자 보조금 45억원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허상 뿐인 사업계획서로 지자체 보조금 절반 가로채 비용 부풀리고 완공 날조, 보조금 매입부지 매매각도 현세 낭비, 투자 기회 날리며 보조금 사업 취지 무색

A씨는 “다른 지자체와 투자 협의를 진행했고, 국내 대기업과 제휴도 맺었다. 수출 제의도 받아 조율 중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자본금 8억원, 외부 유치 42억원, 금융차입 443억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결국 지자체는 나사가 내세운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보조금 6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중 45억원은 실제 집행했다.

그러나 결국 A씨가 가짜 투자 계획을 내세워 지자체 보조금만 빼돌린 행각이 들 통 나고, 해당 지자체는 한 해 투자유치 재원의 절반 가량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장 시설비를 부풀려 역대 보조

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산물 유통법인 대표 B(58)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형식상 설립한 ‘유령 법인’을 통해 시설 설비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남 모 지자체의 투자 유치 시설보조금 3억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효소공장을 지으면서 해당 지자체가 산단 내 시설 투자액의 20%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 법인과 가짜 납품 계약으로 납품단가를 실제 5억64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더 부풀려 차액 만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와 약정한 제조 시설 투자를 마치지 않고도 짜고 친 거래 내역을 증빙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조기기 제조기업 대표 C(52)씨는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8년 12월 전남 지자체에 투자 약정한 제조시설 투자를 마친 것처럼 꾸며 시설공사 보조금 1억745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수익성이 불명확한 사업으로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타냈고 자금난에 시설공사를 마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자 건설업자까지 동원해 거래 내역을 꾸며냈다.

최근 경찰도 전남 도내에서 지자체로부터 공장 신축을 입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땅을 재매각하는 등 수법으로 업체 30곳이 보조금 130억원을 타낸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 유치·진흥 보

조금을 가로채는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 다른 지자체와 투자 협의 상황을 실제보다 과장해 회유하는 등 지자체 간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을 악용한 범행도 있었다. 지리적 거리나 입지 여건 상,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당장의 투자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조금 편취로 인해 지자체가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형세는 형세대로 낭비하고, 진짜 투자할 기업은 보조금 지원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며 보조금 사업 취지 자체가 무색케 된다.

결국 지자체 역시 투자하려는 기업의 실제·자산 가치, 실제 투자 의지와 수익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의 경우, 광역지자체까지 나서 사업 검토·투자 심사 등을 하는 데도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을 걸러내지

못했다. 투자 유치 약속만 첩첩 같이 믿고, 면밀히 살펴야 할 보조금 지급 심사와 사후 점검은 소홀한 셈이다. 투자 유치 성과가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이자 성적표로 여겨지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투자 양해각서 체결만 해도 홍보에만 열 올리는 지자체가 정작 사업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투자 협의 단계부터 기업의 건전성·수익성을 두루 살피는 엄격한 보조금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1일 “투자가 실제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며 “실제 사업이 단계 별로 잘 진행되는지 꾸준히 사후 관리·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투자 유치용 국고 보조금을 나눠 먹으려는 업체와 브로커, 대행사까지 째짜미로 얽힌 조직적 범행도 적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